

대학평의원회 요구서

2023학년도 모집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대학 본부는 여러 구성원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본부의 의도대로 모집정원 153명을 감축했다.

여러 구성원들이 우려한 바대로 우리 대학의 감축 규모는 타 대학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과 올해 입시에서 우리 대학보다 훨씬 많은 미충원 인원을 낸 목포대의 경우 106명, 안동대의 경우 41명, 순천대의 경우 20명만을 감축했다. 기본역량진단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군산대조차도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150명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다.

본부의 모집정원 감축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 신뢰성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다.

첫째, 신뢰성의 문제다. 감축 규모를 결정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학 본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다.

- 지난 1월 24일 원주캠퍼스, 25일 강릉캠퍼스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기획처장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대학적정규모화> 계획을 소개하면서, 2021년 미충원 인원의 90%를 ‘강제’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90% 감축이 최저기준선이라고 오해한 구성원들은 이후 어떠한 논의에서도 타 대학과 같은 41명 감축, 20명 감축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시나리오도 논의할 수 없게 하였다.
- 2월 10일 160명 감축을 결정한 학사구조혁신위원회에서 기획평가과가 위원들에게 제시한 감축 규모의 예시를 보면 (133명+알파)를 최저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감축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 결정 선택권을 침해한 중대한 잘못이고, 위원들에게 본부가 의도한 선택을 강요하여 대학의 운영 및 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둘째, 소통의 문제로 교수회가 책임자 면담,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여러 단계를 통해 본부에 전달했지만, 본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교수회의 긴급 <공개 질의>,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60명 감축 규모가 과도하다는 교수회 서한문 등을 본부와 공유하였으나 본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된 타 대학의 감축 규모 반영, 2022년 입시 결과를 반영하여 감축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견,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의견 등 여러 합리적인 대안 등도 검토하지 않고 결정을 밀어붙였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다. 본부는 153명 모집정원 감축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이후에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여, 대학의 최종심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절차를 요식 행위로 만들었다.

모집정원 감축을 통해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대학 본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의도했던 실수든 훼손된 절차와 부정확한 정보로부터 도출된 결론은 그것의 정당성까지 훼손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평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대학 본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타 대학과 비교하여 과도한 감축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신뢰성의 문제, 소통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대학 본부는 책임지는 자세로 구성원에게 이해를 구하라.
2. 교육부에서 이미 승인한 사항을 뒤늦게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식 행위로 만든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3. 이번에 결정한 모집정원 감축으로 인해 대학 구성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을 구성원에게 약속하라.
4.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의 부실한 관리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임을 직시하고 대학 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요 지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번 모집정원 감축 규모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진단해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2.04.28.

강릉원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요구서>에 대한 본부 답변

친애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학은 더 이상의 입학정원유지 전략에 한계를 맞으면서 치열한 학생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입학자원 경색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우리 대학 고유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나,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제공되면서 갈등이 조장되고 있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2~3년이면 닥칠 생존경쟁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생존 방법을 어떻게 찾아 나가느냐, 아니면 쇠퇴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시간이 촉박한 문제로 인해 구성원들과의 공감을 충분히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생존의 절실함을 단과대학 설명회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혁신계획 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고, 다양한 접근으로 자료제공을 통해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감축에 대한 적절한 규모와 방법, 절차에 대한 구성원의 각기 다른 해석과 오해 등이 야기되었고, 그에 대한 구성원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기에 대학평의원회의 요구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① 강제감축이 아님에도 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② 연도별 감축 시나리오를 논의할 수 없게 했고, ③ 133명+ α 라는 최저 감축선을 제시하여 의사결정 선택권을 중대하게 침해, 선택을 강요하여 대학 발전에 위험적 피해를 초래.

인구감소로 인한 시대적 난제인 입학자원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맞물리면서 공간을 채우기가 버거운 재정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고, 대학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 외부자금 유치가 불가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 아니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은 대학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 규모를 두고 여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적 교육환경 변화에 자생적 대처 능력을 찾기 위한 시발점으로써 구성원에게 위기를 알리고 대응하자는 취지와 예견될 수 있는 학생감소 상황을 분석하여 우리 나름의 전략적 대비 태세를 갖추자는 취지였음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① 정원감축 관련 자료는 교육부의 적정규모화 정책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사실을 기반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발표 자료를 제공한 기획처장으로서 교육부의 의도와 각 대학이 마주친 재정적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원감축은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는 의견은 분명하게 전달했고, 미충원 인원의 90%를 강제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학 소식 전문 언론사의 입학정원 감축 관련 헤드라인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가·교육부, “文 정부, 정원감축 자율기조 포기다, 아니다” 공방

대학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연계, 강제나 마찬가지”, 교육부 “대학 정하는 정원감축 기준 여전”

정원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이 ‘권고’이지, 정원감축을 하지 않으면 정부재정지원을 끊겠다는 조치는 한국 사립대학 재정적 현실에서 보면 **사실상 강제적 조치**나 다를 없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해 온 방식과 다르지 않다

출처 : Usline(유스라인)(<http://www.usline.kr>)

[이슈 파헤치기] 교육부 “자율적 대학 정원감축” “구조개혁 폐지”한다지만...

독자들을 위해 결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의 대학 정원감축의 자율화’ ‘구조개혁평가 폐지’는 **사실상 논속임**이다. 교육부는 ‘강제’의 반대말이 ‘자율’인 것처럼 포장하며, ‘강제 정원감축’ 기조를 폐지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은 ‘강제’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반(半)강제’ 전략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news.unn.net>)

정원 감축, 폐교·청산 등 대학 구조조정 내년부터 본격화

권역별 유지충원을 점검을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 받는다. 정원 감축 미이행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강제적인 정원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② 인원 감축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감축 방법은 23학년도 일괄 감축이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확한 감축 인원을 산정한다는 것은 어렵기에 일반적인 경향성과 개연성을 두고 산정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감축 규모를 두고 긍정평가도 부정평가도 할 수 없습니다. 입학정원 감축은 다른 대학과의 레이싱이 아니라 우리 대학만의 마라톤을 해야 합니다. 타 대학의 감축 인원이 우리 대학보다 작다 하여 그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대학만의 완주작전과 전략으로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대학평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기본역량진단평가준비가 최우선과제이어야 합니다. 탈락으로 인한 연쇄적인 부작용과 신입생 모집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정원감축이라는 생존 해법을 찾아야 했고, 점진적인 정원감축은 평가대비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기에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22~’24년도 신입생 충원을 지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24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이 깔린 선택이었습니다. 노력과 아픔을 투입하여 밀 빠진(푼린)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지속적인 악순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시작단계에서 보수하고 물을 가득 채우는 선제적 대응전략입니다. 그리고 ‘24년 새로운 대학 집행부에게 무거운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는 배려의 마음도 일부 있었습니다.

③ 학사구조혁신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원감축의 취지와 자료 분석결과 감축 방법과 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 설명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제출된 133+ α 의안의 철회 요구 및 수정안(수정동의) 제시가 있었다면 논의를 거쳐 변경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수정안 제시가 없었기에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원감축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묻기에는 구성원마다 생각이 다르기에

이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지만, 다양한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와 토론 끝에 결정(찬성 28:반대 15, 기권1)된 사항입니다. 비록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회의 말미에는 현재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개선과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현행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표현은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정원감축이라는 예민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학사구조혁신위원 나쁨의 심적 부담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기에 53명의 위원회 결정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각을 달리해서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대처를 누구의 잘못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보다는 현 상황을 잘 이해하고 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④ 교수회는 타 대학의 감축 규모 반영, ⑤ '22학년 입시 결과를 반영하여 감축 규모를 결정 책 입자 면담, ⑥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여러 합리적인 대안 등도 검토하지 않고 교수회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반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주장

어떠한 합리적인 대안이라도 모두를 공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이 되어야 하고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 파악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한 차례 교수회장과 면담은 있었지만 정원감축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교수회의 의도성이 짙은 의견수렴 결과가 신뢰성과 합리성이 담보된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학사구조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고 그들의 합의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행정적·절차적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④ 대학평의원회 요구서에는 앞뒤 맥락을 모두 거르고, '목포대 106명, 안동대 41명, 순천대 20명만을 감축했고 군산대는 3년간 150명 규모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르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구성원에게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공한다면 이 요구서가 과연 신뢰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학 대표기구로서 정확한 정보를 구성원에게 제공하고 판단하도록 해야 오판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국가중심 국립대학의 입학감축 현황을 보면, 군산대는 총장 부재(발령.3.17)로 '23학년도 감축 인원을 결정할 수 없었고, 최근 기본역량진단평가 재진입 평가(22.5.3) 이후 52명을 우선 감축하고 선정결과에 따라 최종결정한다고 합니다. 목포대는 규정에 따른 산출인원은 106명이고 이들 '23학년도에 일괄 감축, 그 이유는 차기 보직자에 감축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순천대의 경우 '23학년도는 규정에 따라 20명 감축으로 이전에 결정해 놓았고, '24~'25학년도는 98명을 놓고 교수회 심의 중입니다. 안동대는 선제적으로 86명을 이미 감축했고 '24~'25학년도는 117명 총 203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표 1. 주요 국가 중심대학 21~25년 입학정원 감축 현황 ('22.5.10. 기준)

대학명	'21		'22		'23	'22~'25	비고
	입학정원	미충원인원	입학정원	모집인원	미충원인원	감축정원 ¹⁾	
강릉원주대	1,833	133 (7.2%)	1,833	1,745 (95.2%)	26 (1.5%)	153 (8.3%)	
군산대	1,735	235 (13.5%)	1,735	1,738 (100.0%)	290 (16.7%)	52 (3.00%)	2차 탈락 시 감제정원조정
목포대	1,576	204 (12.9%)	1,591	1,601 (100.0%)	225 (14.1%)	106 (6.73%)	
순천대	1,628	168 (10.2%)	1,658	1,664 (100.0%)	143 (8.6%)	20 (1.2%)	
안동대	1,456	398 (27.1%)	1,411	1,413 (100.0%)	285 (20.2%)	41 (2.8%)	22년 45명 감축
목포해양대	691	33 (4.8%)	691	693 (100.0%)	6 (0.9%)	36 (5.2%)	특수 목적대

1) '21년 입학정원 대비 해당 연도(기간) 감축 입학정원 2) '22년 모집인원 대비 미충원 인원

※ 위 각 대학의 담당자 또는 부서장의 전화연결로 파악된 자료로 일부 다를 수 있음

표 2. 일반재정지원대학 대구경북강원권 유지충원을 및 미충원 인원

대학명	충원율		유지 충원율	21학년도 미충원	22~25학년도 정원감축 예정 인원
	신입생	재학생			
한동대	100.000	118.896	107.558	0	0
포항공대	99.688	102.422	100.781	1	0
연세대(미래)	99.925	101.186	100.429	1	0
한림대	99.944	100.085	100.000	1	0
경북대	98.508	101.547	99.723	69	69(21 미충원인원의 100%)
계명대	98.440	101.480	99.656	72	0
영남대	99.430	92.277	99.369	26	0
금오공대	99.586	98.000	98.951	5	0
강원대	98.875	97.434	98.299	51	51(21 미충원인원의 100%)
춘천교육대	100.000	95.639	98.255	0	0
대구교육대	99.740	94.648	97.703	1	0
경일대	97.601	96.759	97.264	38	-
대구가톨릭대	96.245	93.686	95.222	57	성인학습자과정/ 1,518명의 11% 감축
경동대	95.507	92.756	94.407	74	141(~'22)+89('23) = 230명 감축
경운대	98.395	88.091	94.274	19	23년 0명(프라임), 24년 5%인 59명+α
동국대(경주)	93.303	93.561	93.406	118	
강릉원주대	92.768	93.457	93.043	133	23년 153명
대구가톨릭대	83.764	92.762	87.363	465	23년 393명(13.6%)+α(21년 약대 35명 중)
대구대	80.835	87.577	83.532	780	22년 208명, 23년도이후 60명 유보(총장부재)
안동대	72.888	86.813	78.458	398	22년(45명) 포함 203명
한라대	69.101	89.666	77.327	275	-
대경강원권	94.022	96.456	94.996	2,584	21년 기준이며, 3주기 기본역량진단 만점 기준
비수도권	98.774	97.656	98.327	11,108	

3주기 기본역량진단 만점기준 유지충원율에서 만점인 대학

21년 권역 평균 유지충원율에서 만점인 대학 + 3주기 기본역량진단 만점기준 유지충원율에서 만점 대학

3주기 기본역량진단 만점기준 유지충원율+ 21년 권역 평균 유지충원율 만점진입하지 못한 대학(누적)

'22년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대경강원권 경쟁대학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정보공시 기준 (21.04) 신입생과 재학생충원율은 비수도권 기준과 대경강원권 기준의 만점 대학이며, 붉은 색 표시 대학은 비수도권 기준과 대경강원권 기준보다 낮은 대학입니다.

교육부가 밝힌 권역별 정원감축 범위인 30~50%에 우리 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북대와 강원대 미달 인원의 100%, 대구한의대는 입학정원의 11%, 대구가톨릭대 13.6% 등 많은 대학이 나름의 생존전략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대학의 감축 규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각 대학이 놓인 상황이 다르고 단순한 모방이나 이를 절대적인 감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타 대학의 감축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라는 판단은 작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 함께 고립될 수 있기에 감축의 경향성과 예측성을 토대로 우리 대학만의 예상 감축 인원을 결정해야 하고 학생유치 경쟁 시대에 우리만의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재정손실 등 다각적인 손익을 고려해야겠지만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재정손실을 극복할 방안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재정 악화로 인한 후폭풍이 오히려 더 두렵지 않을까요?

⑤ '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기본역량진단평가편람 권역별 설명회에서 일정 순연 요청의견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전달했지만 '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시 자료가 아니며,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⑥ 교수회가 제시한 합리적이라는 감축 방안이라는 단계적인 연착륙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도 이미 현 집행부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한 대안 중 하나였으며, 오히려 그것은 입학자원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성이든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회가 제시한 대안이 무조건 옳았고 그러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어 모든 구성원을 혼돈에 빠뜨리는 표현은 과하다 할 것입니다.

셋째, ⑦ 153명의 모집정원 감축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후, 대학평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고 최종심의기구인 대학평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

국립대학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6조 등 현행 법령에 따라 대학의 자치 입법권과 행정권을 부여받은 대학 내 최고 의사결정자입니다. 대학평의위원회는 현재의 법령상 특정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정원은 각 대학이 임의로 증원·감축할 수 있는 대학 자율적인 사항이 아니며, 교육부 승인 이후 학칙에 반영해야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정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을 보면 심의가 필요한 사안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폭넓게 그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이는 대학평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듯 대학평의위원회는 대학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어떤 이슈들이 중요할지 파악해서 그 이슈를 논의하고, 총장이나 주요 행정부서장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학의 운영은 법적인 부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곳에서의 의사결정은 공적인 힘을 갖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대학평의원회 설치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사립과 국립은 구조적 차이가 있고 대학마다 차이는 다소 존재합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① 입학정원 조정, ② 모집단위 통합·분리·조정, ③ 전공 분리 및 통합, ④ 협동과정 설치·폐지, ⑤ 학위과정 연계 및 통합운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립대학과 국립-사립대학 법인의 차이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대학평의원의 역할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모든 대학은 '신입생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과 재학생충원율, 취업률은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며, 신입생충원율과 재학생충원율은 신입생 충원율의 이중적 사용 부작용에 대한 산출식이 가진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기에 동시 병행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 문제점을 교육부에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이러한 신입생충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이 정원 내 전형 이외에 정원 외 전형을 통해 1만3천명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실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지만, 부실한 지표관리의 주체가 꼭 누구의 책임이냐를 묻기보다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호연계하여 종합적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에 있어 학생이 먼저이고 그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대학의 생존 전략 중 자발적 혁신의 시작이며, 현재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혁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키야 미호, 야나세 히로이치 저자의 「대학의 위기, 뒤집어보면 기회다」의 본문 글귀입니다. “대학이라는 정원(庭園)에는 설계자와 관리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수진과 교직원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인 학생입니다. 이들을 섬세하고 건강하게 관리해서 키울 뿐만 아니라 정원을 설계하고 규칙을 정해 보듬으며 꽃을 피우게 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매니지먼트라고 말이죠”

향후, 중요한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참여하여 대학 발전에 대한 논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 5월 12일

기 획 처 장 최 성 범